

‘AI·국방반도체’ 육성 정부, 700조 이상 투입

》1면 ‘반도체 산업…’서 계속

용인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부산·구미 남부권 혁신벨트 구축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1조 투자
국방반도체 전주기 기술 자립 추진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 자리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2047년까지 총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팹(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용인 일반산단의 1호 팹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6월에는 용인 국가산단의 토지보상 공고를 진행하는 등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면서,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취약점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도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전 전주기(소재-설계-공정-시스템)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앵커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한다.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심인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한동훈 ‘당계 논란’ 조사결과 공개 파장

조사 내용에 가족 이름·탈당 시기 포함
당내 일부 의원, 공개 시점에 우려 표시
중간조사 발표가 당 운영·결속에 영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다수인데, 오히려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9일)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기자회견 긴급공지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동훈 당계 논란”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계(당원게시판)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 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A, B, C의 경우 같은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A, B, C는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장모, 장인의 이름과 같다. 또 한 전 대표의 딸과 이름이 같은 D씨의 경우 재외국민당원이었다는 점도 밝혔다. 이들의 탈당 시기는 지난해 12월 ‘12·3 내란’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다는 사실까지도 공지에 담겼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민감한 조

사 결과를 감사위원장 개인 명의로 중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의 공지엔 ‘한 전 대표 가족이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이 서울 강남병(한 전 대표 거주지) 소속이었으며, 한 전 대표는 해외 유학 중인 딸이 있는데 딸과 이름이 동일한 D씨가 재외국민당원이라는 점, 이들의 탈당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한 전 대표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중간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친한계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발표’라는 입장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이라며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우재준 의원도 전날 “당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다. 그렇기에 지난 특검의 압수 수색에서도 모든 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하길 바란다. 충분한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여야 강대강 속 본회의만 소집 실질적 민생 입법은 ‘제자리’

민주당, 가맹사업법·민생법안 우선
국힘, ‘8대 악법’ 반발하며 필ib 예고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안 불투명
하도급법·정보통신망법 민생법안 대기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요구가 있어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맹분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의원들이 조를 나눠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있는 쟁점법안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여야 간 소통해야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우리 당은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는 이미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종사자의 ‘주52시간제 면제’ 제도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법사위의 체계·지구 심사만 남기고 있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처한 가운

데,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실시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엔 ‘사업추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과징금 법안 발의

국회 과방위, 17일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 등 주요 경영진 증인 채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향한 정치권의 눈초리가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고, 국회 정부위원회에선 쿠팡을 겨냥한 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 차

레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무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

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제도에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급효과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형벌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